

대학원생노조 강령

1. 우리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지부운영과 조합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대학원생 노동자의 조직화와 단결을 위해 투쟁한다.
2. 우리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대학원생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전면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3. 우리는 대학원생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대학 내에서의 민주적 권리 확보, 교육권 확대를 위해 투쟁한다.
4. 우리는 교수-학생을 포함한 학문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하관계를 자유롭고 평등한 동료 연구노동자 관계로 재정립하기 위해 투쟁한다.
5. 우리는 연구노동 개념의 확장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투쟁한다.
6. 우리는 고등교육 및 연구 공공성 확대와 민주적이고 평등한 대학사회의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7. 우리는 지부의 성평등을 실현하고 대학 내 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투쟁한다.
8. 우리는 모든 노동자와 사회적 소수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및 개인과 연대투쟁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연구하기 (위해) 운동하기:
그래서 대학원생+노동조합

대학-학계의 사건 사고들과 대학원생-연구자의 인권

성적 자기결정권: 성폭력, 성적 지향 및 취향에 대한 검증

저작물에 대한 권리: 공동저자 표기 누락, 성과물 도용, 대필

건강에 대한 권리: 실험실 안전사고, 기타 업무 중 사고, 정신 건강

노동에 대한 권리: 연구비 횡령, 현행 근로장학 제도, 사적 업무 지시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을 권리

강력한 위계

- 장학금 분배, 추천서, 학위에 대한 권한
- 학계와 실무 분야에서의 권위
- 도제식 문화

대학 기업화

- PBS: 운영 자율성 극대화
- 최저 비용 최대효율 추구
- 무계획적 대학원 TO 확대

제도/정책적 공백

- 대학원 전담 행정 부처 및 관련법 미비
- 장학금 집행 관련 원칙-전일제 학생
- 구성원 교육 및 징계 관련 규정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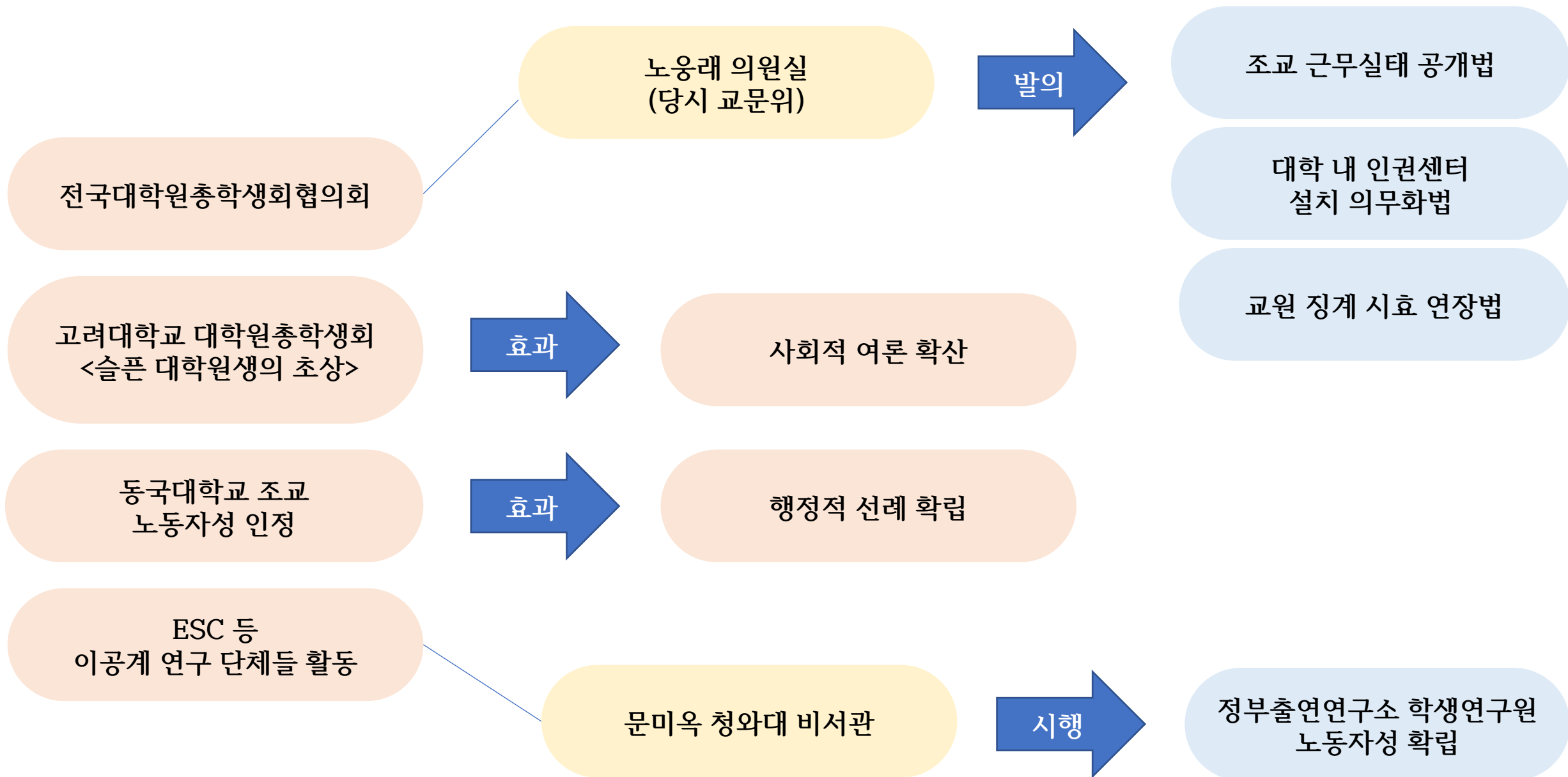


성폭력

폭언
폭행

노동
착취

대학원생노동조합 이전의 대학원생 운동





- 실태 조사 및 권리장전 표준안 제정
- 이후 ‘전원협’은 권리장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입법 촉구 활동 전개

- 대학원생 인권 현황 및 생활 환경 전수 조사, 정책 제안 연구 진행
- 상당한 노동권, 인권 침해 경험 & 문제제기-공론화 어려운 조건 확인

<국가인권위>의 대학원생 인권장전 제정 및 인권전담기구 설치 권고 (2016)



이후 동국대, 중앙대, 이화여대, 아주대 등 전국 각 대학에서 권리장전 선포 (2017)

교육부 표준안 ▶ 학교 별 대학원생-본부-교수 대표 협의체에서 수정 및 제정



[1장 총칙]

- 1) 목적-기본 인권 보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
- 2) 기본원칙-존중 받을 권리/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의 학업, 연구, 근로할 권리/
성별, 나이, 종교, 국적에 의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2장 대학원생의 권리]

- 3) 자기결정권-사생활의 자유/건강, 안전, 혼인, 모성의 보호, 가족 생활을 우선 할 권리
- 4) 학업 연구권-학업 지속/양질의 교육/연구 공간 및 지원 시설 이용에 대한 권리 등
- 5) 저작권-상당한 기여를 한 연구의 공저자/독창적 성과물의 제1저자가 될 권리
- 6)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이의제기를 할 권리
- 7)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각종 학내 협의체 참여/자치기구를 조직, 활동할 권리 등

- 8) 조교의 권리-근로 시간, 내용, 임금 기준이 준수 될 권리 등
- 9) 재정운영에 관해 알 권리-소속 학과, 전공, 프로젝트의 재정운영에 관해 알 권리 등
- 10)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무관한 부당한 일을 거부 할 권리
- 11) 지도교수 변경의 권리-지도교수의 의무/대학원생의 변경 권리/예외적 변경 조항
- 12) 해결 절차-권리를 침해 당할 경우 문제제기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 할 권리 등
- 13) 구성원의 책무-모든 구성원이 권리장전을 숙지, 존중, 실현 할 책임/대학원의 권리
장전 및 인권 교육에 대한 책임
- 14) 그 밖의 권리-권리장전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중시 요구

[부칙] 1) 각 대학의 권리장전 수정과 활용이 가능함을 명시

미성숙한 피교육자 (X)
대등한 협의 동참 주체 (O)

대학원생

본부

교수

일방적 대학 운영(X)
과정 공개 및 협의(O)

도제식 관계 지속(X)
시민적 관계 추구(O)

- 권리장전은 강제성, 구속력 X
- 인권, 주체, 협의 등에 대한 구성원 교육 지속 필요
- 협의체 모델, 대화의 통로를 정비하는 장기적 관점 요구
- 대학원생 대표자의 역할이 결정적

그래서 대학원생노동조합

[현실 1]

- 학생이자 노동자라는 대학원생의 자기 인식
- 대학원생에게 실제로 노동자성 존재 (학생연구원, 조교, TA, 학회간사 등)
- 본부 혹은 교수자 지시-대학원생 수행 사이의 위계에서 권리 침해 발생

[현실 2]

- 대학원생의 권리와 관련, '구속력'을 지니는 사회적 합의 일반 및 규범 미비
- 여전히 노동으로 재현되지 못하는 대학원생의 노동
- 대학원생의 목소리를 가시화 할 당사자 조직 (거의) 부재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가 유리하다는 판단

이중 정체성을 인정하나 노동자X 학생O
임금X 근로 장학금O

대학원생조교 근로장학금: 시급 5,100원 선
업무 경계 불분명
주말, 야간 업무 지시

PBS 중 연구책임자의
전체 비용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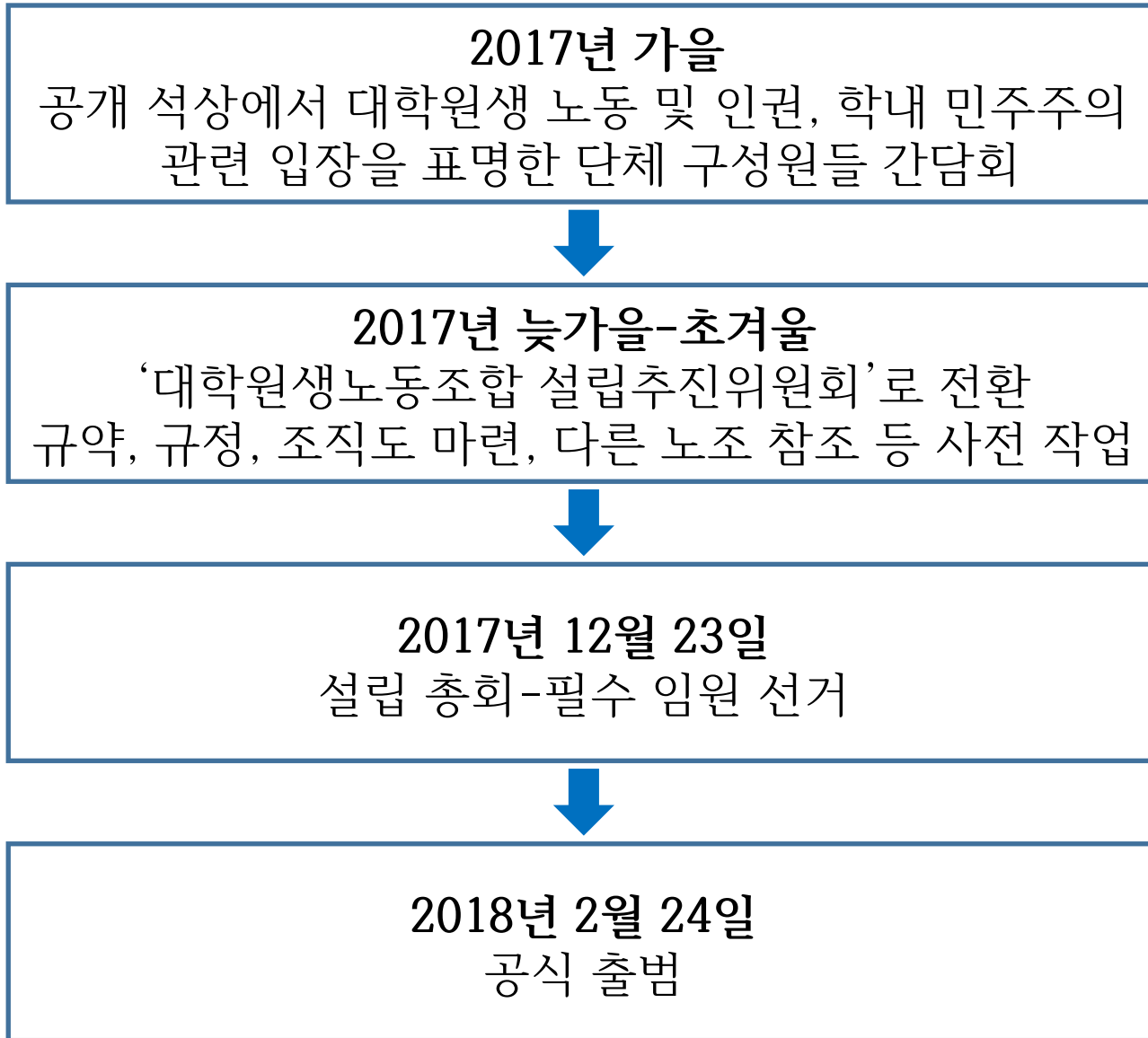
장학금 및 인건비
턴 백, 풀링, 횡령

성차별 및 근무 중 발생하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

노동조합 결성
노동 3권 쟁취

- 대학원생의 노동의 노동법(EX.근로기준법 일반 및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적용 대상화
- **사용자(대학 본부)**의 의무와 책임 강화
- 입법: 교육부, 과기정통부 등 관련 부처 제도 개선

대학 본부/담당 부처와의 단체 교섭 (2년마다 갱신)-법적 의무 사항
'근로기준법 상의 최소 기준'을 넘어 연구 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요구 관철
= 대학원생의 조건을 대학원생이 직접 구성



상급단체 가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각 대학교 대학원총학생회
연락망 구축 및 협업 의사 타진

대학원생 권리 침해 사안 제보 접수 및 대응

출범식 이후 현재까지 상시 접수

2018년 상반기에는 약 30여건의 노동권 및 인권 침해 사안 대응, 처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정식 자문 계약 체결, <직장갑질119>와 협업, <대학원생119> 운영

전국 단위 대학원생 연구 환경 실태 조사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이후 레퍼런스 부재 (노동/인권 관련 지표)

정세 분석, 정책 및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데이터

대학 공공성 확보 및 전체 구성원 노동 존중을 위한 연대

동국대학교, 연세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대학노조, 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 민교협, 연구자의 집 등 활동 단체 연대

조합원 교육과 자율 세미나 지원, 운영

성평등 교육 이수 의무

노동과 페미니즘, 북미 대학원생노동조합 단체 협약 연구, 기타 등등. 조합원 (재)조직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학 연구실 사고 피해구제 및 안전성 보장

경북대 실험실 폭발 사고에 대응하여 국회 농성 투쟁을 진행하였으며, 이것이 법제화로 이어짐

대학원생 권리 침해 사안 제보 접수 및 대응

대학원생 연구원 ‘노동자’로 첫 인정 - 학생연구원 지도 거부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판정
지도교수 부당 행위 대응 - 불법 유전자 채취 규탄 성명/대학원생 대상 벌금 및 인건비 유용 금액 반환
대학원생노동조합 사건 제보: <https://forms.gle/NQSHRHFVhZV3Q6g58>

대학원생 학술연구 권리 확보 및 정책 제언

대학원생 주관 연구 사업 참여 기회 및 지원 확대- 인문사회학술연구 B유형 주관 거부 철회
인문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연구자 복지법 법제화 참여

2024년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대응

대학 연구 환경 피해를 예측 및 분석하고 대학원 총학생회 등과 미래세대 연구자 간담회를 개최
국정감사 및 국회 토론회 참여하여 학문후속세대 연구개발정책 제언

학술연구 관련단체 연대 활동

과기노조, 과기연전노조,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등 과학기술 단체와 연대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대학노조 등과 함께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 참여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2024년 활동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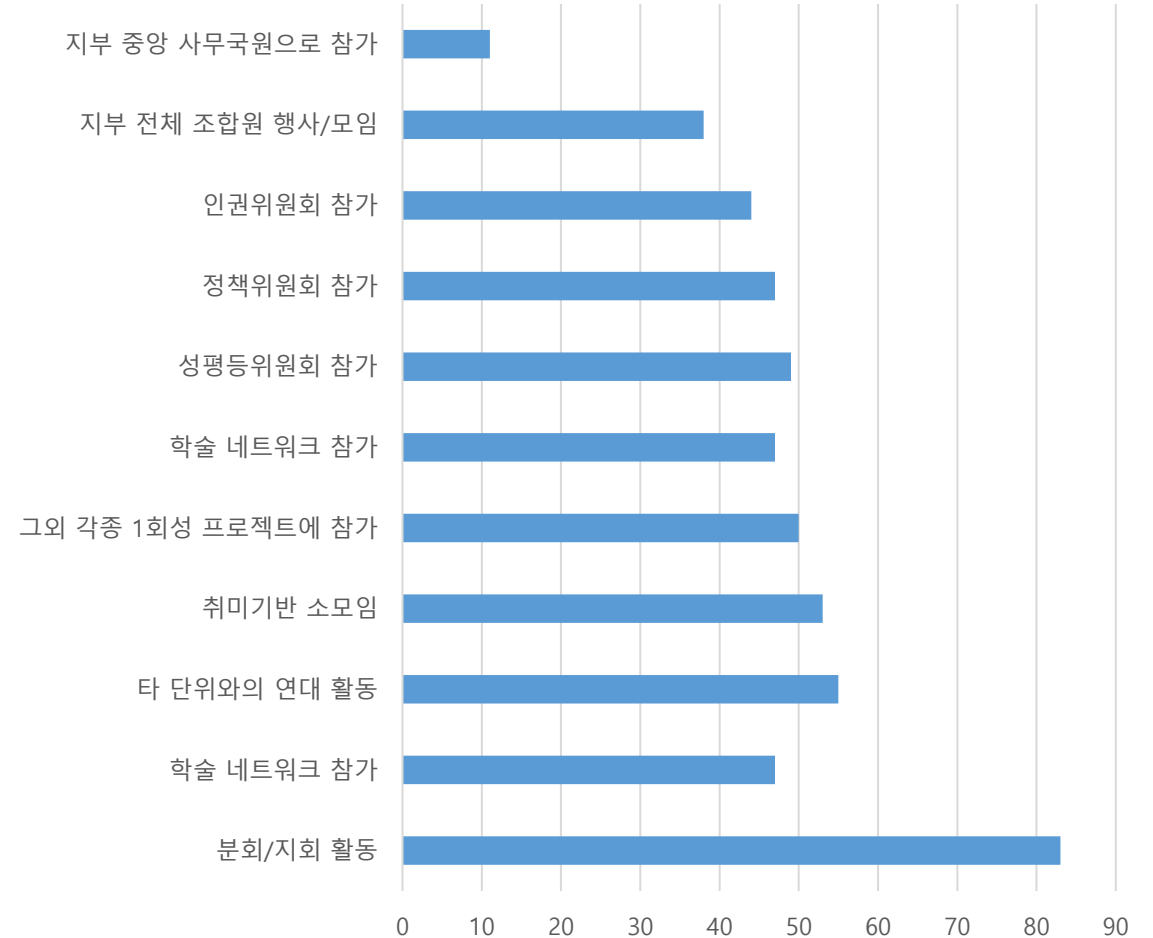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 이준영

2025.1.11
DESIGN

RESEARCH

2023년~2024년 신규가입자 특성

□ 희망 활동



활동 요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12/14)



윤석열 내란세력 완전청산, 전국교수연구자 선언



노동조합 활동 (2/28, 8/26)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의원회 (2/28)



프리드리히 재단 워크숍 in 네팔(8/26)

고등교육 관련 외부 활동



지방대 위기 극복을 위한 학내 구성원과 지역 사회의 역할 (5/9)



연구안전망 확보와 연구자복지법 제정 관련 토론회 (8/31)



대학체제 전환운동포럼 (6/21)



대학 내 노동 차별 개선의 법적 제도적 과제 (10/07)

연구개발 관련 외부 활동 + 국정감사



R&D 예산 삭감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토론회 (9/12)



R&D 정상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제언 (2025/1/9)

연구개발 관련 외부 활동



대학원생 노동권 관련 외부 활동

최저임금 “더 넓게, 더 높게”

• 최저임금 바깥의 노동자 증언대회 •

일시 2024년 5월 10일(금) 10시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620호
주최 공공운수노조

프로그램

- 사회 _ 박정훈 부위원장 (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
- 증언 (각 10분) _ 이상형 택시지부 정책위원장
_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팀
_ 이준영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수석부지부장
_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

*문의 정양현 정책부장 (010-2668-0881)



통영노동조합경기 청년유니온 할말잇수다

최저임금밖 할말잇수다

2024. 05. 22. 10:00 전태일기념관

[1부] 우리가 여는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밖 당사자의 할 말)	[2부] '스포해줘'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직접 답한다!!)
- 대학생 - 한국GM비정규직 - 이주노동자 - 쿠팡물류센터 - 데이터라벨러	- 박정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문의 : 오민규(010-3644-1977), 하은성(010-6469-0816), 청년유니온(02-735-0261)



최저임금밖 노동자 대회 (5/10,
5/22)

미조직활동가 대회 (12/5~12/6)

최저임금 바깥의 노동자 증언 대회



대학원생 관련 정책 제언

9. 대학원생 근로자성 보호

	입장	공약
더불어민주당	찬성	없음
국민의힘	—	없음
녹색정의당	찬성	대학원생 노동권 보호
개혁신당	—	없음
진보당	찬성	적극 공감하며, 전폭 수용함.

10. 전국 대학원생 실태조사 정례화

	입장	공약
더불어민주당	찬성	별도 공약 없음.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대학인권센터를 모든 대학에 설치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예산도 반영하지 않고 있음. 인권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대학별 예산지원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대학원생 대상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등을 병행할 것임.
국민의힘	—	없음
녹색정의당	찬성	대학구성원 노동권 보장 및 실태조사
개혁신당	—	없음
진보당	찬성	적극 공감하며, 전폭 수용함.

<목차>

<대학원생 노동권 보호>

- 1) 대학원생 근로자성 보호를 위한 근로계약 체결 의무화
- 2) 대학원생 대상 전국실태조사 정례화
- 3) 대학원생 권익 보호기관 설립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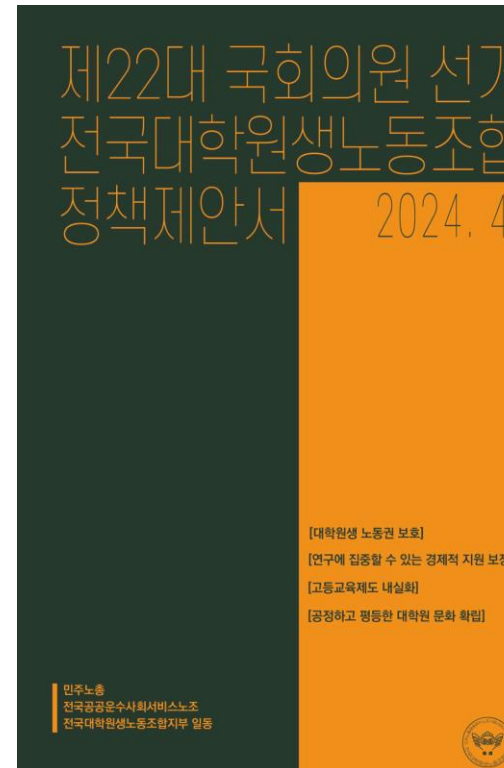
- 1) 충분하고 안정적인 연구개발예산 확보
- 2) 투명하고 든든한 학생 인건비 지급

<고등교육제도 내실화>

- 1) 강사 처우 개선
- 2) 학회의 구조적 쇄신과 학술 주권 회복

<공정하고 평등한 대학원 문화 확립>

- 1) 지역 대학원생 지원 확대 및 연구자 양성 기능 강화
- 2) 외국인 유학생(대학원생)에 대한 관리 정책 필요
- 3) 부모 학생 지원



성명문 및 기자회견

대학원생 대상 불법 유전자 채취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

~고려대 의대 A교수 개인정보보호법·생명유리법 위반 처벌하라~

고려대학교 의과학과 A교수는 소속 대학원생과 학부연구원 및 연구소 직원을 대상으로 구강 상피 세포를 불법적으로 채취하였고, 그로부터 추출한 RNA 유전자를 발현량 측정을 위하여 외부로 유출하였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약칭 생명윤리법)은 인체로부터 수집한 RNA를 ‘인체 유래물’로 규정하고, 이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를 ‘유전자 검사’로 정의한다. 또한, 유전자 검사에 관한 서면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고려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불법 유전자 채취 전에 대하여 피험자의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관리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2020년 9월 10일 대학원생노동조합 고려대분회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A교수의 불법유전자채취를 생명유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였다. 2024년 1월 2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연구윤리 위반 행위의 발생 사실은 모두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에서 취급한 RNA 발현량 측정을 유전정보 및 유전자 검사로 볼 수 없다고, A교수가 신성한 증인의 증언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 무죄 판결하였다.

A교수의 생명윤리를 위반한 연구 앞에서 대학원생은 취약했다. 해당 판결은 “교수인 피고인의 연구실에 소속된 연구원들로서는 신분상·경력상의 불이익 등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수직·폐쇄적인 문화가 대학원생의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생명유리법은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의학 연구윤리를 다룬 헬싱키 선언은 ‘의존 관계에 있거나 강압에 따라(연구 참여에) 동의할 수 있는 경우를 주의하고, 이 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적절한 자격을 갖춘 개인이 사전 동의’하도록 권고한다. 지도교수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불법 유전자 채취는 금지되어야 하고 마땅히 가중 처벌하여야 한다.

국내법과 국제 연구윤리를 무시한 A교수의 연구를 무죄 판결한 1심의 결과는 과학기술적 용어를 과소 해석했다. 판결의 요는 1) RNA의 발현량을 유전정보로 보기 어렵고, 2) 이를 측정하는 small RNA sequencing을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RNA는 DNA로부터 전사(傳寫, Transcription)된 유전 물질이다. DNA는 유전정보로 인정하면서 RNA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문서의 유출은 죄이지만 문서 필사본의 유출은 죄가 아니’라는 태변에 가깝다. 또한, 현재 RNA 전사체(Transcriptome) 분석 기술과 그 활용을 고려할 때 RNA 발현량 측정은 유전

자 검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과 관련 없이 개인의 특성이나 건강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 RNA 전사체의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을 식별하거나 질병을 예방·진단·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개인정보 및 인체 유래 데이터 보호 정책(예컨대 EU의 일반데이터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과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질병관리청(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인간 대상 연구 규정)은 RNA를 유전정보로 여기고 이를 보호하도록 한다. RNA 발현량을 유전정보로, small RNA sequencing을 유전자 검사로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은 분자유전학의 관점에서 비합리적이며, 생명공학과 국제 과학기술법의 발전을 간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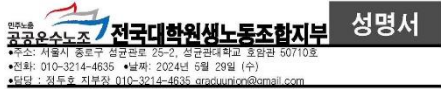
불법적으로 취득한 유전정보는 대학원생에게 폭언을 가하는데 악용되었다. A교수는 채취한 학생의 유전자를 정신질환 환자의 유전 정보와 비교하며 우열한 유전자여서 실험을 잘 못한 다”고 조롱하였다. 그러한 해석이 저열한 것임을 논의로 하고서라도, 이는 피험자의 RNA 발현량 정보 유출 시 발생할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들은 유전자 채취가 별도의 보상 없이 오후 10시까지도 이루어졌고, A교수가 학생들에게 화를 많이 내고 자주 소리를 지르며 욕박지른다고 증언했다. 개인정보보호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적인 유전자 채취는 노동권과 인격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대학원에서 더욱 큰 피해를 낳았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대학원생은 감정노동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전자와 유전정보까지 착취당했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착취의 지평을 개척한 A교수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

연구윤리와 연구 절차를 무시한 A교수에게 연구자의 자격이 있는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습득한 유전정보를 곡해해서 악담을 퍼붓는 A교수에게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가? 남한태도 못 할 짓을 자기 대학원생에게 서슴없이 한 A교수에게 교수의 자격이 있는가? 의학 연구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책임감을 배우며 우수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항소심은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연구로 피해를 본 대학원생에게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미래 의학 연구자로서 가져야 할 생명·연구 윤리의 무게감을 일깨워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생명유리법을 위반한 A교수를 처벌하고, 고려대학교는 의료인·연구자·교수의 자격 없는 A교수를 파면하라.

2024. 2. 20.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불법유전자채취 (2/20)



반복되는 교수 갑질, 스러지는 것은 학생 뿐이다.

~교수 노예 보고서, 제발 방지를 위해 대학원생 노동자성 인정하라~

2024년 5월 <예일노동뉴스>는 교수 노예 보고서라는 제목의 인기 기사를 이어 보도하였다. 생물의 한 도립대 정밀 교수이자 스탠포드 대표인 이 아무개 교수가 개지른 심각한 학대는 제자이자 스타드립 회사의 직원인 김동수(가명)를 경제적으로 착취하였고, 육체적으로 상처를 입었으며, 심리적인 장해를 남겼다. 장장 네 편을 거쳐 서술한, 400인 간의 11건의 노동법 위반은 피해자가 오랜 기간 필요하게 피랍함을 당해왔으며, 복잡적이고 다층적인 교수-학생 관계가 여러 종류의 노동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는 수직적인 교수-학생 관계이자 일무의 지사-종속, 인건비의 공약-수역 사슬이 명백한 사용자-노동자 관계였다. 그러나, 이 아무개 교수는 근로기준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종차 대한 위반을 일삼았다.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교수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근처 카페에서 서서간 대기하며 휴게 시간 없이 장제 근로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경제적인 최우는 상식을 벗어났다. 일금을 채불되었고, 일무 상의 실수를 이유로 인간비에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하였으며, 논문 태미티 처리 비용 등을 납부하도록 강제하였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액수는 무려 6,000만원이다. 더욱이, 교수의 미국 연수 시 필요한 렌터카나 숙소를 대여하거나, 교수의 파제를 대신하는 등 일무 의 지사를 비롯하여, 폭행과 폭언도 잦았다.

가자가 이제기전 노예제라고 부르는 교수의 학대는 2022년 9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피해로 500만원 부과 이후 2년이 넘도록 공회전하고 있다. 피해자는 채불 일금을 아직 지급 받지 못하였으며, 반복적·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중증의 우울 에페스트를 일무상 제하고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피해 학생이 신체적·정신적·금원적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책임 있는 태도와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2025년 장년대 원문교수 사건을 떠올린다. 해당 사건의 피해 대학원생 또한 교수의 개인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교수는 인건비를 착취했고, 온갖 이유로 벌금을 매겨 피해자를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하였으며, 폭행과 폭언에 심지어는 인분을 먹이기도 하였다. 그 사건은 우리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을 조직한 이유 중 하나였다. 약 10년의 시간이 흘러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낸 대한민국 고등교육제도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더 이상의 피해를 보는 대학원생이 없어야 한다. 교수의 노예가 아닌 한 명의 노동자로서 노동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의 피해 학생은 피해 회복과 가해자 처벌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 지급 의무 위반 등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위반을 노동위원회법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스탠포드 회사와의 명시적인 근로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었다면 피해 학생이 적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 휴일 없이 강제 근로하고, 인건비는 교수 마유대로 책정되며,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다른 대학원생들은 이러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사건에서 대학은 피해를 인지하지도, 교수를 처벌하지도, 학생을 보호하지도 못하였다. 결국 학생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무사를 선임하고, 노동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홀로 투쟁을 이어 가야만 했다. 학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노동을 수행하는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교수 갑질의 제발 방지를 위해서는 학생 대상 근로계약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은 사업자로서 학생의 근로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등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에 전국대학원생노조는 요구한다.

- 관계 당국은 피해 회복을 위해 조속히 산재를 인정하고 채불 일금을 지급하도록 조치를 취하라!
- 대학은 가해 교수를 파면하고 교수 갑질의 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대학원생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체결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2024년 5월 29일
민중노총 공공운수노조사회서비스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교수노예보고서 (2/20)

성명문 및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하겠습니다. 되돌아보겠습니다. 투쟁하겠습니다.

KAIST 학위 수여식 대통령실의 과잉 경호를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 복원하고, 미래세대 연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유례없는 R&D 예산 삭감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들었는가? 과학자 한 명의 말이라도 무겁게 들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2024년 학위 수여식 축하 도중 R&D 예산 삭감에 항의한 KAIST 졸업생의 사지를 가법게 들고 강제 퇴장시켰다. 그 날 오전 대통령실이 대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까닭은 R&D 예산 삭감의 현실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었을 것이 다. 민생토론회에 참여한 대학원생과 KAIST 졸업생은 모두 R&D 예산 삭감의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하는 학생연구자이고, 두 행사 모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젊은 과학자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강조하였다. 민생토론회의 참여자와 피켓을 든 졸업생은 모두 국민이고 그 둘의 발언권의 무게는 같다. 마땅히 발언권을 존중받아야 했던 그는 “R&D 예산을 복원하십시오, 생색내지 말고.”라는 짧은 문장을 끝으로 강제 연행되었다. 우리는 그가 입을 틀어막혀 하지 못했던 말을 대신하여 보충하고자 한다.

“과학 강국으로의 켄트 점프를 위해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축사가 생색이라는 주장은 합리적이다. 5조 2천억 원 삭감이 예정된 예산안을 국회 의결로 겨우 6천억 원 증액에 놓고 “R&D 예산 6천억 원 추가 반영”을 현수막에 자랑스럽게 써 붙여서 대진 곳곳에 걸여놓은 여당의 생색이 처음은 아니다. 말은 번지르르 하고 나중에 가서 약속은 안 지킨다는 정치권이 못 미덥긴 하였으나, 벼яти 예산을 후려쳐 놓고 나서 양심 없이 확대하겠다는 약속은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관계가 틀렸다. 예산을 깎아 대통령과 축사를 한 대통령이 같은 대통령인가? 아니면, 한 일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인가?

또한,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은 R&D 예산 삭감의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하다. 왜냐하면 1) 사업 대학원 평균 등록금인 월 약 800,000원을 지불하는 수준에서 그칠 정도로 부족한 금액이고, 2) 이미 하한선을 보장하도록 2018년 개정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형해화하며 3) 국가R&D예산 삭감으로 인해, 국가 R&D과제 참여 학생인건비를 추가 지급 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출을 늘리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수준으로 인건비 지급 규모를 현실화해야 하고, 연구 수행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별도의 추가 지급 또는 재정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에 앞서 과학기술인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비판적 합리주의이다. 비합리적인 R&D 예산 삭감에 대하여 과학기술계는 당사자로서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과학기술을 대표하는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과 소속 과학기술인은 동문의 발언권을 끝까지 보호하지 못했다. R&D 예산 복원은 한 정당의 대변인이기 이전에 KAIST의 졸업생으로서 대통령에게 전하는 말이다. R&D 예산 삭감에 대한 과학기술계 전체의 의견은 일지한다. 이에 대학원생노동조합도 졸업생과 함께 발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 복원하고, 미래세대 연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KAIST 학위 수여식 입틀막(2/19)

304명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 기나긴 명부 앞에서는 거듭 말을 삼가게 됩니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사회적 참사였고 구조적 참사였습니다. 애초부터 넘어질 준비가 되어있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배’는 사전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생명을 제치고 10년간 분무하며 ‘4.16안전사회연구소’를 차린 유가족 장훈의 말처럼 “병명만 얼굴을 한 공범들”이 쌓아 올린 잘못들로 인해 출항이 허락되었고 바다 위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춥니다. 배가 완전히 가라앉기까지 101분 동안 제대로 된 구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와 정부는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지 못했고 참사 발생 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전하게 방기했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에게 윤리적 빚더미를 모두 떠안기고, 그들을 십 년 동안의 지옥에 가두고, 끝없는 은폐, 헐뜯, 모략, 비난과 조봉을 일삼은 수많은 공모자가 있습니다. 그간 박근혜 정부 때만 해경까지로 이어지는 기회주의적 정치 엘리트와 보신주의적인 관료제 속 개인들이고 하고, 부정부부작위(不眞正不作爲)로 일어난 참사일이 분명함에도 세월호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며 예도를 강제로 중지하려 들거나,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말들로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욕보인 국우 보수 인사들을 비롯한 수많은 도적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십 년, 우리는 이태원 참사를, 오송역 참사를, 맞닥뜨렸고 정부에 비판적이라고 여겨지는 세력가이러면 여지없이 적대의 대상으로 낙인찍어 입을 틀어막는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소와 회의를말로 진상규명의 방해물임을 통감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세월호 참사 일련의 과정을 똑똑히 되짚고 기억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되짚으며 생명, 안전, 재난, 건강 등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모순 속으로 깊이 들어갈 것이고, 낙인찍히고 내 버려진 자들과 뒤얽리며 투쟁할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대일을 살아낸 유가족과 생존자들 곁에서 우리가 이 죽음을 함께 기억하고, 기록하고, 애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품은 현재를 그러며 묵묵히 걸어 나가야 합니다. 단일한 발전주의와 진보주의를 경계하되, 우리가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의 가능성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소설가 한강이 오송로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을 말할 때 인용했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사자왕 형제의 모험』 한 대목을 옮깁니다. 기억하고 되돌아보며, 투쟁하겠습니다.

나는 두었 때문에 요나단 형이 이처럼 위험한 일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기사의 농장 벽난로 앞에 앉아 편히 쉬면 안 될 까닭이 뭐한 말입니까? 그러나 형은 아무리 위험해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째서 그게?”
내가 다그쳤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고 다들 게 없으니까.”
(…)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벽난로의 불길도 찾아들었습니다.
다름 날 새벽, 나는 문간에 서서 요나단 형이 말을 타고 안개 속으로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뱃나루 끝까지는 온통 새 벽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형이 점점 멀어져,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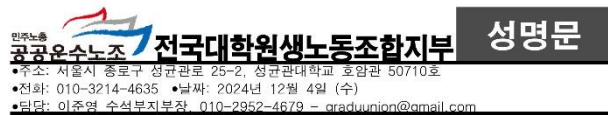
2024년 4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주부

304명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고해인 김민지 김민희 김수경 김수진 김영경 김예은 김주아 김현정 문지성 박성민
우소영 유미지 이수연 이연화 정가현 조은화 한고운 김지윤 오유정 김수정 남지현
송지나 박주희 강수정 박혜선 김채원 허다운 윤솔 강우영 이혜정 김민지 김소정
김주희 전하영 정지아 조서우 남수빈 양은유 한세영 박정은 윤민지 허유림 김담비
김도연 김빛나라 정예진 전영수 김소연 김수경 김시연 김영은 김지민 박영란 박예
슬 박지우 박지운 박재연 백지숙 신승희 유예은 유혜원 이지민 장주이 최수희 최
윤민 김주는 한은지 황지현 강승묵 강신욱 강혁 김웅기 김정현 김호연 박수현 박
정훈 빈하용 슬라바 안준혁 안형준 장진용 정차웅 김동혁 김범수 권오천 김진우
임경빈 임요한 김대희 김용진 정휘범 진우혁 김운수 최성호 한정무 홍순영 김진우
김민석 김민성 김성현 김진우 김완준 박성호 김인호 박홍래 박진리 박준민 서동진
오준영 이석준 이진환 김도현 이창현 이홍송 인태범 정이삭 조성원 김진광 천인호
최남혁 김한별 문종식 최민석 구태민 권순범 김동영 김동형 김민규 김승태 김승혁
이태민 전현탁 박세도 이세현 정원석 박영민 황민우 서재능 선우진 이다운 신호성
이건계 김승환 최덕하 이영만 홍종영 남현철 이장환 박수인 김진호 김기수 김민수
김성빈 김수빈 김정민 박성복 나강민 이준우 국승현 박인배 박현섭 최현주 허재강
서현섭 성민재 손찬우 송강현 심장영 안준근 양철민 오영석 이강명 이근형 이민우
이수빈 이정인 이진형 전찬호 정동수 김상호 고우재 김대현 김동현 김영창 김제훈
김창현 박선균 지상준 박수찬 박시찬 백승현 안주현 이승민 이승현 이재욱 이호진
임건우 임현진 장준형 김선우 김재영 전현우 제세호 조봉석 조찬민 최수빈 최정수
최진혁 홍승준 고하영 권민경 김아라 김초예 김혜선 박예지 오경미 이보미 이수진
이한솔 김해화 임세희 정다빈 정다혜 배향매 조은정 진윤희 김민정 최진아 편다인
강한솔 구보현 권지혜 김다영 김민정 김송희 이소진 김주희 김슬기 김유민 박정슬
이가영 이경주 이다혜 이단비 이은별 장수정 이혜주 이경민 장혜원 고창석 김응현
김초원 남윤철 박육근 양승진 유니나 이지혜 이혜봉 전수영 최혜정 구준미 권재근
권혁규 김기웅 김문익 김순금 김연혁 리상하오 문인자 박성미 박지영 방현수 백평
권 서규석 서순자 신경순 심숙자 안현영 양대홍 우점달 윤춘연 이광진 이도남 이
모희 이세영 이영숙 이은창 이제창 이현우 인옥자 전종현 정명숙 정원재 정중훈
정현선 조지훈 조충환 지혜진 최순복 최승호 최창복 한금희 한윤지

세월호 참사 10주기 (4/16)

성명문 및 기자회견



비상식적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하야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처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 하였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거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일 때에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포할 수 있다. 40여 년 전 한국 현대사의 상처를 다시 해집은 비상계엄은 윤사 윤석열이 법이 규정하는 요건에 정세를 자의적이고 편협하게 꿰맞추는 시도를 서슴없이 해왔다는 자백이다.

계엄 선포의 이유로 거명한 북한 공산 세력과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은 실체가 있는 위협이라기보다 이념 전쟁에 빠져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던 윤석열 정부가 일버릇처럼 하는 말에 가깝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원인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4조 1천억 원 삭감된 예산안과 기부금과 탄핵으로 경색된 경제 때문으로 보인다. 2024년 R&D 예산만 4조 6천억 원을 일괄적으로 삭감한 윤석열 정부가 용치가 소멸되지 않은 예비비와 이자 비용 위주로 4조 1천억 원을 삭감한, 아직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예산안을 두고 선포한 비상계엄은 비상식적이다.

야밤에 기습 선포한 비상계엄 이후 해가 채 뜨기도 전에 국민은 평화로운 일상을 위협받았다. 환율은 치솟았으며, 주식 선물,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기업의 주가와 비트코인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 경찰은 ‘음호 비상’ 발령 목전에 와있었으며, 현역 군인의 전역은 연기되었다. 심지어 이들은 내란에 동조하도록 부당하게 지시 받았다.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따라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 하는 내란의 가장 큰 원인은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대통령의 권한은 성문화된 법률 내에서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취급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당연한 권리처럼 행사한 윤사 윤석열은 국내 법령의 자구는 살피보았는지도 모르겠으나, 대통령 윤석열은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무능력·무관심했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오했했다. 정치 조보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화된 대한민국의 염두를 넘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하라!

2024년 12월 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AIST 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비상계엄 사태 (12/4)



비상계엄 사태 (12/4)



R&D 정상화 2030 정책 요구(3/30)

2025년

함께 만드는 대학원생노조 이화여대분회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이화여대분회 설립취지문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할 세계

2024년 12월 3일 내란병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맞서는 사람들의 대투쟁 과정은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를 꾸러가는 시간이었다. 여성, 노동자, 농민, 장애인, 성소수자, 외국인, 그리고 그 외 수많은 모든 연대하는 시민들은 남태령과 한강진에서 광장을 열어가며 이전 시대의 권력에 균열을 내며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자 했다. 광장이라는 장소는 사회의 규범에 따라 은폐되었던 것들이 드러나 제 목소리를 내는 곳이었고, 구조적 폭력 속에 감춰지거나 감춰져야 했던 것들이 드러나는 시간이었다. 서로 다른 차이를 인지하며 '우리'라는 공동체와 연대체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이다.

지금 세계에서 대학원생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렇다면 대학원생들의 목소리는 과연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현재 이화여대 대학본부가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등록금 내의 근로장학금'을 받으며 노동하는 대학원생들의 몫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노동은 인정받지 못하고 말해지지 못한다. 대학원생의 노동은 순종적인 '근로'로 호명되며, 대학원생 또한 학생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노동의 대가는 '장학금'이 된다. 그러한 장학금마저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은 이중 삼중의 노동에 시달려야 한다. 이마저도 모든 대학원생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다. 특수대학원생은 그러한 장학금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대학원생과 달리 특수대학원생들은 지식생산 노동을 하지만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의 노동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노동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또 다른 노동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지 특수대학원생만의 일은 아니다.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은 학비를 조교 노동 등으로 충당하고, 생활비를 그 외 노동으로 마련하며 지식생산 노동을 하고 있다.

'운이 좋게'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이 되어도, 교육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부족한 교원수로 개설되는 수업마다 인원이 과중되어 수업의 질이 하락하고, 논문 학기생들은 제대로 된 지도마저 받지 못한다. 심지어 교수 충원을 하지 않아 세부 전공을 바꾸거나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그 와중에 등록금은 별도의 논의 없이 인상되었고, 대학원생들은 고지서를 통해 등록금이 인상된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별다른 대책이나 지원 사업 없이 입학한 유학생들이 유학 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겪는 어려움은 개개인의 의지 문제로 환원되었고, 그 결과 대학 내 배외주의적 문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그리고 학문의 길을 걷고 지식생산 노동을 하고자 부푼 마음에 대학원에 진학한 대학원생들이 꿈꾸던 '학문 공동체'는 와해되었다.

자조에서 벗어나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자

학내 구성원으로서 대학원생은 본부 운영 기금 마련을 위한 대학본부의 ATM이 아니다. 대학원생은 배우고 실천하며 대학 사회를 일궈나가는 학생이자 노동자이다. 그러나 기업을 되어버린 대학교는 신자유주의에 철저히 복무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 궁극적으로 인건비를 줄여 자본을 축적하는 신자유주의를 공고히 하며, 그 바깥을 상상하지 못하게 한다. 대학본부는 인건비를 줄여 자본을 축적하고, 등록금은 증액하지만 교원은 충원하지 않는다. 그에 따라 대학원생이 노동하는 강도는 이전과 같지만, 장학금은 오히려 감액되지만 노동환경은 변화하지 않았다. 학생과 노동자라는 두 가지 정체성 사이에서 저항하지 못하고 주권을 잃은 상태를 우리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 학생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노동을 노동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학위를 받으면 착취도 끝날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래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우리는 학생으로서 교육권, 노동자로서의 노동권을 모두 쟁취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학원생노조 이화여대분회의 설립을 선언한다.

이화여대분회가 다시 만들어갈 세계

2017년 2월 출범한 대학원생노조는 대학원생의 학업, 노동과 인권 환경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지금 여기, 이화여대의 대학원생들이 쟁취할 학업과 노동에서의 정당한 권리를 위하여, 나아가 대학원생들의 권익 증진에서 이어지는 학내 구성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우리는 대학원생노조 이화여자대학교분회를 설립하고, 2025년 2월 27일 출범식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활동을 알리고자 한다. 대학원생노조에서는 고려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동국대에 이어 5번째 분회이다.

무엇보다 이화여대분회는 대학원생노조 출범 이래 처음 탄생한 여자대학교 분회이다. 우리는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신자유주의와 가부장제가 결합된 방식으로 목소리를 소거하는 방식을 경험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여대분회에서는 계약직 직원, 조교 및 연구(보조)원으로 노동하는 대학원생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사이에서 소거된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여 모두의 해방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이화여대에도 사회적 약자들은 다양한 얼굴로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화여대분회는 출범 이후 다음의 활동을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 및 연구 노동을 수행하는 대학원생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노동 및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생 노동자를 대표하여 협상 주체로서 교섭권을 획득한다.

셋째,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대학 행정 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모두가 존중 받는 이화를 위하여 유학생을 비롯한 학내외의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한다

2025년 2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이화여자대학교분회

가입·재보·문의사항: graduunion.ewha@gmail.com

분회장 조민형(국어국문학과)

이화여대 대학원생 여러분, 함께 대학본부로부터 우리의 권리를 직접 되찾읍시다!



Eng. Ver.



CHN. Ver.



JPN. Ver.

대학원생노조 이화여대분회

- 2025년 2월 27일 출범
- 다섯번째 분회, 최초의 여대 분회
- (논문학기를 포함한) 등록금 및 장학금 문제, 조교 노동, 연구 노동, 교수 충원 문제, 학교의 유학생 관리 소홀 문제 등에 대한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함.



대학원생노조 가입링크